

다른 2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50대 여성이다. 이들은 11월 13~22일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11월 23일 입국한 후 하루 뒤인 24일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뒤 오미كرون 변이 확진자는 점차 늘어 12월 13일 총 114명으로 100명을 넘었고, 12월 31일 0시까지 확인된 변이 확진자가 총 894명이었다.

■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

정부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해 왔으나 확진자와 중환자가 급증해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를 결정하고, 12월 18일부터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12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최대 4인으로 제한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밤 9~10시 영업종료 조치를 적용했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그룹' 4만 곳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그룹' 96만 곳은 밤 9시에 문을 닫아야 했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 '그룹 및 기타시설' 2만4천 곳은 밤 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단, 청소년 입시학원 등 소아·청소년 대상 학원은 운영에 제한이 없다.

행사·집회 참석 인원도 크게 줄었다. 일상회복 이후 99명까지는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았고 100명부터는 방역패스를 적용했으나, 거리두기 적용 이후에는 50명 이상이면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300명 이상 초과하는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빚투’ ‘영끌’에 부동산-주식-코인 시장 고공행진

■ 개요

2020년부터 시작된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2021년 한국 경제에는 '유동성 잔치'가 벌어졌다.

각종 투자 자산에 자금이 몰리며 부동산·증시·가상자산 시장이 모두 고공 행진했다.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속어)',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도 상승장에 일조했다.

전국 주택 가격은 19년 만에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코스피지수는 개인 투자자들의 활약에 힘입어 사상 첫 3,000시대를 열었다. 코스피지수는 7월 6일 3,305.21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상자산 투자 열기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사상 최고가인 8천 200만원대를 기록했다.

과도한 유동성 속에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자

신의 소득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각종 투자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다만 과도한 유동성 속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물가가 크게 오르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금융당국은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은행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하며 0%대 '제로금리 시대'의 막을 내렸다. 이에 연말 들어서는 차츰 각종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 열기가 사그라졌다.

■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19년 만의 최고 상승폭

2021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대규모 공공 대책 속에서도 천정부지로 오름세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최고 75%까지 오르면서 8월까지 매물이 품귀현상을 보인 가운데 집값 상승에 불안감을 느낀 2030 세대가 '영끌'에 나서면서 신고가 거래 행진을 이어갔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가격은 전년 말 대비 14.97% 오르면서 2002년(16.43%)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국내 주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매매가는 전국적으로 20.18% 올라 2020년 상승률(9.65%)의 2배에 달했다. 전국 빌라(다세대·연립) 가격 상승률은 6.99%를 기록하며 역시 전년 상승률(6.47%)을 웃돌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폭발적인 유동성 증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 지속, 공급 불안이 겹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가릴 것 없이 집값이 동반 상승했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국 집값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주택 가격은 18.61% 올라 2006년(20.34%)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12.50%)과 경기(22.49%)는 2006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인천(23.75%)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6년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6년은 판교, 위례 등 2기 신도시 개발 호재 등으로 이른바 '버블세븐'(강남권 3구·목동·분당·평촌·용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시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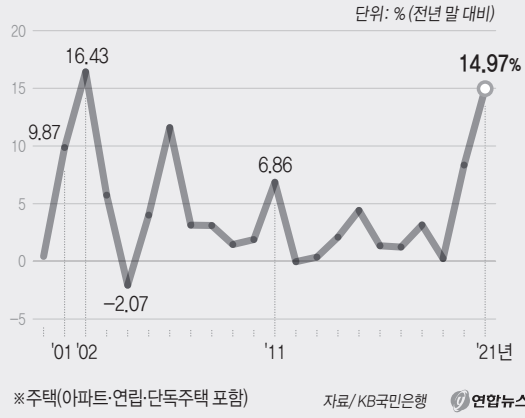
수도권 아파트값은 25.42% 올라 2006년 상승률(24.61%)을 뛰어넘었다. 2020년(12.51%)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2021년 2030 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조사 이래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30 세대(20대 이하 포함)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2021년 평균 31%로 집계됐다. 이 조사가 시작된 2019년의 28.3%, 2020년 29.2%에 이어 처음으로 30%를 돌파한 것이다.

전세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 효과로 더욱 불안한 모습이 연출됐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11월까지 9.27% 오르며 2020년 전체 상승률(7.32%)을 일찌감치 넘어섰다. 전세난이 심각했던 2011년(15.38%) 이후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다만 정부가 8월부터 한 차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 데 이어 10월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등 돈을 줄을 옥죄면서 차츰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진정되기 시작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10월 26일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한 초강력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은 이후 집값 하락 조짐이 나타났다.

■ 코스피, 3,300선 돌파

2021년 코스피지수는 이른바 '동학 개미'의 활약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사상 첫 '코스피 3,000시대'도 열렸다. 연초 2,874.50에서 출발한 코스피지수는 1월 6일 장중 3,000선을 돌파했고, 다음날인 7일에는 3,031.68에 거래를 마쳐 종가로도 3,000선을 넘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등이 고조되면서 코스피지수는 6월 들어 3,300선을 돌파했고, 7월 6일에는 3,305.21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3월 10일 연저점인 890.07까지 떨어졌다가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및 백신접종 확대 기대감에 힘입어 8월 9일 연고점인 1,060.00을 기록하며 '닷컴버블' 이후 약 20년 만에 '천스닥'으로 재도약했다.

지수의 상승을 이끈 것은 개인투자자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역대 최대인 66조원여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6조원여치와 39조원여치를 순매도해 2년 연속 팔아치웠다.

코스닥시장에서도 한 해 동안 기관이 5조4천57억원여치, 외국인이 3천493억원여치를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10조9천39억 원여치를 순매수했다.

'대어급' 신규 상장이 잇따르며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주 열풍도 뜨거웠다. 2021년 유가증권시장 신규 상장 기업은 전년보다 12곳 늘어난 23곳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5월 11일 상장한 SKET(시총 2조4천억원), 8월 10일 크래프톤(4조3천억원), 8월 6일 카카오뱅크(2조5천억원), 11월 3일 카카오페이(1조5천억원) 등 기업이 잇따라 상장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유가증권시장 공모 금액은 17조2천억원으로

로 2020년 3조3천억원의 5.2배에 달했다. 코스닥 신규상장 공모금액 역시 2020년보다 38.5% 증가하며 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하반기 들어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규모 축소) 등 통화정책 기조 변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다.

7~11월 코스피지수는 5개월 연속 하락(월간 기준)하며 2021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11월 30일에는 코스피지수가 2,839.01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폐장일인 12월 30일 코스피지수 증가는 2,977로 3,000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다만 2020년 말(2,873) 대비로는 3.6% 상승한 수치였다.

반면 하반기 들어 지지부진한 코스피 대신 코스닥의 테마주 중심의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코스닥은 '형보다 나은 아우'에 도전했다. 2021년 마지막 거래일 코스닥지수는 1,033.98로 장을 마치며 전년 말 대비 6.77%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메타버스, NFT가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며 관련주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위메이드맥스(1,505.54%), 위메이드(834.10%), 데브시스터즈(638.25%), 위지웍스튜디오(600.70%), 컴투스홀딩스(547.14%), 네오위즈홀딩스(490.80%), 엔피(442.40%), 텍스터(426.69%) 등이 연간 40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2021년 유가증권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5조4천억원으로 2020년 12조2천억원보다 26.2%(3조2천억원) 증가했으며 거래량은 2020년 9억 주에서 2021년 10억4천만 주로 15.6%(1억4천만 주) 늘었다.

■ '코인 광풍' 속 비트코인 롤러코스터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관심이 컸던 가상화폐는 2021년 한 해 동안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비트코인은 한때 사상 최고가인 8천200만원대를 기록했지만, 연중 최저가는 3천100만원대로 그 차이가 약 2.6배에 달했다.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며 가상화폐 시장은 3~4월 호황을 맞았다. 가상화폐는 유명 인사들의 말 한 마디와 시장의 풍문에 따라 출렁이며 큰 변동성을 보였다. 특히 그 중심에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있었다.

2월 들어 머스크가 15억 달러여치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비트코인을 테슬라 결제수단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자 비트코인은 크게 뛰었다.

머스크가 만우절을 맞아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이 CEO로 있는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문자 그대로의 도지코인을 문자 그대로의 달 위에 놓을 것"이라고 쓰자, 도지코인이 급등하기도 했다.

증시에서보다 더 빠르게,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몰리며 소위 '코인 광풍'이 불었다. 상승장 속에서 자신만 소외되고 있다는 두려움, 이른바 'FOMO(Fear Of Missing Out)'가 더 많은 투자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이었다.

특히 2030 세대가 코인광풍을 주도했다. 1분기 빗썸·업비

트·코빗·코인원 등 4대 거래소의 신규 가입자 250만 명 가운데 2030 비중은 63.5%에 달했다.

2030 세대 사이에서는 “코인이 유일한 계층 사다리”라며 “대안이 없어서 투자하는 것”이라는 호소도 나왔다.

4월에는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8천만원 선을 넘어섰다. 코인 광풍 속에 ‘코인 폭동’, ‘코인 우울증’ 등 사회적 인 질병을 호소하는 이들도 나타났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은 중국이 주요 가상자산 채굴장을 폐쇄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상승세가 꺾이더니, “비트코인을 통한 테슬라 구매를 중단하겠다”라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 발언 등의 영향으로 8월 국내 비트코인 시세가 3천만원대까지 폭락했다.

비트코인의 연중 최고가는 11월 9일 기록한 8천270만원(업비트 기준)이었고, 연중 최저가는 1월 22일 기록한 3천166만2천원(업비트 기준)이었다.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진 한 해였다. 4월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시장 과열에 따른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과 정부에서 다 보 호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했으며, 9월 가상화폐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의 개념을 ‘화폐’가 아닌 ‘가상 자산’으로 정립하고 거래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관리하려는 정부의 행보도 빨라졌다.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정부에 신고해야만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수리를 거쳐 모두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폐쇄 수순을 밟게 됐다.

대선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검찰·공수처 수사

■ 개요

대선을 앞둔 2021년 하반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여당과 제야당 대선 후보 당사자·측근이 연루된 각종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선거운동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쥔 두 수사기관의 수사는 두 후보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 검찰, 李 대장동-尹 김건희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9월 29일 이른바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태훈 4차장검사 지휘로 검사 16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이 과정에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관여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7만8천 평에 5천903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세우는 것이 골자인 1조5천억원 규모 프로젝트였다.

최대 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수익금으로 1천800억원을 배당받았지만, 3억5천만원을 출자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그 자회사 천화동인 1~7호에는 무려 4천40억원이 돌아가 특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수사팀 구성 당일 화천대유와 대주주 김만배 씨 등 관련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10월 1일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의혹을 받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한 뒤 구속했다.

10월 12일에는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19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귀국하자 체포했다 곧바로 석방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성남시청 압수수색 등을 거쳐 두 사람의 신병을 최종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끝에 이른바 ‘4인방’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특혜가 돌아가도록 배당 구조가 설계됐으며, 화천대유 측 편의를 봐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이 김 씨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일부 금액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기소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이 역할을 했다. 이 파일에는 정 회계사와 김만배·남욱 변호사 등이 공동 경비 분담을 두고 다투는 내용, 유 전 본부장에게 배당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54일 동안의 수사가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한 이재명 후보 등 ‘윗선’의 관여 여부까지는 나아가지 못해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갔지만, 사건 관계자들이 연거푸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윗선 수사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12월 10일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뇌물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구속 심사를 앞두고 숨졌으며, 대장동 개발 사업 주무 부서장을 맡았던 김문기 공사 개발사업 1차장도 12월 21일 사망했다.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도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들을 통해 25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국민의힘 박상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2월 1일 법원이 기각했다.